

'18년도 제67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2 교 시

- 객 관 식 (분야별 필수) -

목 차

<과 목(1)>

【행 정 학】 (일반)	1
【형사소송법】 (세무회계, 사이버)	5

<과 목(2)>

【경찰학개론】 (일반)	11
【세 법 개 론】 (세무회계)	16
【정보보호론】 (사이버)	21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는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해당과목에 답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이 선택한 과목순서대로 채점이 되니, 순서를 바꾸어 표기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십시오.

경 찰 교 육 원

경찰교육원 : <http://www.pti.go.kr>

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중 연결이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행정론-정치행정일원론-사회적 형평성 강조
- ② 발전행정론-정치행정이원론-정책 효율성 강조
- ③ 신공공관리론-정치행정일원론-공공가치 강조
- ④ 행정행태론-정치행정이원론-정책 효과성 강조

2. 윌슨(J.Wilson)의 규제정치 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객의 정치’ 상황에서는 조직화된 소수 수혜자 집단의 논리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 ② ‘다수의 정치(대중의 정치)’는 비용과 편익이 모두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되는 경우로 음란물 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 ③ ‘기업가적 정치’는 규제의 수혜자들이 잘 조직화되어 있으며, 환경오염규제가 이에 해당한다.
- ④ ‘이익집단 정치’는 감지된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이 모두 소수의 동질적 집단에게 집중되어 있는 규제정치를 말한다.

3. 정부실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권력의 편재에 대한 방안으로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 ② 정부실패는 관료나 정치인들의 개인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며, 정부라는 공공조직에 내재하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정부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부의 대응방식은 공적 공급, 보조금 등 금전적 수단을 통해 유인구조를 바꾸는 공적 유도 그리고 법적 권위에 기초한 정부규제 등이 있다.
- ④ X-비효율에 대한 방안에는 민영화, 정부 보조 삭감, 규제 완화 등이 있다.

4. 조직효과성을 평가하는 경합가치모형(Quinn & Rohrbaugh)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합가치모형은 인간관계모형, 개방체제모형, 내부과정모형, 합리목표모형으로 구성된다.
- ② 경합가치 모형은 조직에 참여하는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키느냐가 주요 관건이다.
- ③ 창업 단계에 있는 조직은 경합가치모형 중 개방체제모형이 적합하다.
- ④ 경합가치모형은 조직이 성장 발전함에 따라 조직의 성과평가 기준들이 변화할 수 있다.

5. Peters가 제시하고 있는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대안적 정부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모형(market government)은 민간부문이 공공부문 보다 본질적으로 성과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전제한다.
- ② 참여모형(participative government)은 고위 관료와 시민들의 책임있는 정책 참여를 강조한다.
- ③ 유연모형(flexible government)은 전통적 관료조직의 경직성이 불러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시조직 활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 ④ 저통제 모형(deregulated government)은 공직사회 내부 통제 완화를 통해 공직자의 잠재력과 창의성이 고양되면 관료제는 역동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가정한다.

6. 행정학의 주요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태론은 사회현상도 자연과학과 마찬가지로 엄밀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고 본다.
- ② 행정생태론은 환경적 요인을 따로 고려한다는 점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유사성을 갖는다.
- ③ 인간관계론은 외부환경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적 조직론이다.
- ④ 신행정학에서는 1968년에 개최된 미노부르크(Minnowbrook) 회의를 신행정학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7. 공공선택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 가. 경제학적 방법을 응용하여 정치 현상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며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나. 행정은 가치중립적인 것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담당하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 밖에 있으며, 행정기능에 관한 한 모든 정부는 구조적으로 유사성을 지닌다고 본다.
- 다. 니스카넨(Niskanen)은 예산극대화모형에서 관료는 한계편익 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려 한다고 본다.
- 라. 애로우(K.J.Arrow)는 불가능성의 정리에서 바람직한 집합적 의사결정 방법의 기본조건으로 어느 누구도 집합적인 선택의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8.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신공공관리론(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며,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기업을 방향잡기의 중심에, 뉴거버넌스에서는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에 놓는다.
- ② 신공공관리론(NPM)은 작은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동일시하지만, 뉴거버넌스는 큰 정부를 중시하면서 행정과 경영을 분리시킨다.
- ③ 신공공관리론(NPM)에서는 부문 간 협력에, 뉴거버넌스에서는 부문간 경쟁에 역점을 둔다.
- ④ 두 이론 모두 정부실패를 이념적 토대로 설정하여 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하며,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

9. 신공공서비스 이론(NP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 가.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을 강조하였으며, 이론적 토대는 민주주의 이론, 실증주의, 해석학, 비판이론 등 복합적이다.
- 나. 공익을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로 보고 법, 공동체, 정치규범, 전문성, 시민의의 존중 등 다면적 책임성을 강조한다.
- 다. 공공서비스의 이상을 인간에게 가장 높은 가치와 초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조직은 인간을 존경하는 가운데 협동과 공유된 리더십으로 운영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 라. 책임성 확보의 방법으로 행정인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자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강조한다.
- 마. 공무원의 반응대상을 시민보다 고객에 두고 있고, 정부의 역할을 공유된 가치창출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보는 점에서 뉴거버넌스 이론과 유사하다.

- ① 가, 나, 다 ② 가, 나, 라 ③ 가, 나, 마 ④ 나, 다, 라

10. 현대적 정책학의 등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가. 현대적 정책학은 1951년에 발표된 Lasswell의 ‘정책지향(Policy Orientation)’이라는 논문에서 시작되었다.
- 나. Lasswell은 정책학의 특성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성, 범학문성, 규범지향성 등을 들고 있다.
- 다. Lasswell의 주장은 1950년대 당시에 미국정치학계를 휩쓸던 행태주의에 밀려 1960년대 말에 와서야 비로소 재출발하게 되었다.
- 라. 행태주의(Behavioralism)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된 후기행태주의(Post Behavioralism)는 과학적 방법을 지양하고 가치 판단과 관련한 사회·정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지향을 도모하게 되었다.

- ① 나, 다 ② 가, 나, 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라

11.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정책의제설정에는 다양한 사회문제 중 특정한 문제가 정부의 정책에 의해 해결되기 위해 하나의 의제로 채택되는 과정이다.
 나. 정책의제 설명모형 중 동원형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이다.
 다. 올림픽이나 월드컵 유치 등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사례는 외부집단이 주도한 외부주도형에 속한다.
 라. 정책의제설정 과정에는 주도집단, 정책체제, 환경 등의 변수들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마. 사이몬(H. Simon)의 의사결정론은 왜 특정의 문제가 정책 문제로 채택되고 다른 문제는 제외되는가에 대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의사결정은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으로 기득권 세력의 특권이나 이익 그리고 가치관이나 신념에 대한 잠재적 또는 현재적 도전을 좌절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② 무의사결정은 고전적 다원주의를 비판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신엘리트이론이라 불리며, 정치권력이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무의사결정을 추진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정치체제의 규범, 규칙, 절차 자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요구를 봉쇄하는 방법은 사용되지만, 폭력이나 테러행위는 사용되지 않는다.
 ④ 무의사결정은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기존에 누리는 혜택을 박탈하거나 새로운 혜택을 제시하여 매수한다.

13.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투자사업에 따른 모든 비용과 편익을 현재 가치로 산정한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하는 기법으로 동종 사업뿐만 아니라 이종 사업 간에도 정책 우선 순위를 비교할 수 있다.
 ②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을수록 미래 금액의 현재가치는 높아지게 되며, 비용편익비(B/C ratio)가 1보다 큰 사업은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의 바람직한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며, 형평성과 대응성을 정확하게 대변할 수 있는 수치를 제공한다.
 ④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14. 조직이 공유된 목표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거나 조직의 일부 구성원만이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결정모형은?

- ① 쓰레기통모형 ② 최적모형
 ③ 점증모형 ④ 만족모형

15. Allison의 의사결정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적 의사결정을 국가의 정책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모형, 관료정치모형으로 분류하였다.
 ② 합리적 행위자 모형에서는 정부의 전략적 목표가 중시되며 구성원의 응집성이 높다.
 ③ 조직과정모형에서 정부는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체들의 집합이다.
 ④ 관료정치모형은 조직 하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고, 조직 과정모형은 조직상위계층에의 적용가능성이 높다.

16. 하향적 접근방법(Top-down Approach)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책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명확히 정의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정책은 단독법령 또는 다른 권위있는 정책의 진술로 표현된다.

- ② 정책집행의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하향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③ 단계주의적 모형이며, 집행영향요인의 발견과 이를 기반으로 한 집행이론의 구축을 연구목표로 삼는다.
 ④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정책집행을 담당하며, 정책집행 현장을 연구하면서 공식적 정책목표 외에도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17. 준실험과 진실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짚지 않은 것은?

가. 진실험이 준실험 보다 내적 타당성 면에서는 우수하나, 준실험이 실행가능성 면에서는 진실험 보다 우수하다.
 나. 진실험설계의 주요 형태 중 하나인 단일집단 사전사후측정 설계는 동일한 정책대상집단에 대한 사전측정과 사후측정을 통해 정책효과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다. 준실험에서 외적 타당도의 문제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것이 크리밍 효과(Creaming effect)이다.
 라. 준실험은 자연과학 실험과 같이 대상자들을 격리시켜 실험 하기 때문에 호손효과(Hawthorne effect)를 강화시킨다.

-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나, 라 ④ 다, 라

18. 나카무라와 스플우드(Nakamura & Smallwood)가 분류한 정책 집행의 유형 중 '관료적 기업가(bureaucratic entrepreneur)'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책과정을 지배하며 정책결정자는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
 ② 정책결정자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지만, 정책집행자도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정적 권한을 보유한다.
 ③ 정책집행자는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책목표달성에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결정자와 협상한다.
 ④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은 엄격하게 분리되며 정책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결정한 정책을 충실히 집행한다.

19. 동기이론 중 아담스(J.S. Adams)의 공정성이론(equity theory)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투입의 변화로 자신의 생산을 감소시키거나 시간을 줄여서 타인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② 산출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직무보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봉급인상이나 더 나은 직책을 요구한다.
 ③ 목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목표를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데 자신이 설정한 목표량을 조절하여 준거인과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④ 준거인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비교대상을 보다 현실성 있는 인물로 교체함으로써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한다.

20. 탈관료제 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매트릭스 조직은 잦은 대면과 화의를 통해 과업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나. 네트워크조직은 업무처리의 신속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며, 응집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
 다. 계서제 없는 조직은 소집단의 연합체 형성, 책임과 권한에 따른 보수의 차등화,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협동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 모호하고 유동적인 집단과 조직의 경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라. 견인이론(Pull Theory)은 기능의 동질성과 일의 흐름을 중시하며, 권한의 흐름을 하향적·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마. 정보화 사회에서는 삼엽조직이나 공동화조직이 확대되고 기획 및 조정기능의 위임과 위탁을 통해 업무가 간소화 되기도 한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21. 리더십(leadership)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서번트(servant) 리더십은 부하직원들을 상급자처럼 떠받들어 주면서 리더를 따르게 하는 리더십의 일종이다.
 나. 카리스마적(charismatic) 리더십은 리더가 특출한 성격과 능력으로 추종자들의 강한 헌신과 리더의 일체화를 이끌어낸다.
 다. 거래적(transactional) 리더십은 보수적·현상유지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라. 변혁적(transformational) 리더십은 리더가 부하로 하여금 형식적 관례와 사고를 다시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관념을 촉발시킨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2. 막스 베버(M. Weber)가 제시한 관료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료제에서의 직무수행은 문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문서로 기록·보존된다.
 ② 개개 직위의 관할 범위는 법규에 의해서 규정되고 인간적 감정을 고려한 공식적 문서위주의 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③ 관료제의 병리현상으로 과잉동조에 따른 목표대치, 할거주의, 훈련된 무능 등을 들 수 있다.
 ④ 조직이 바탕으로 삼는 권한의 유형을 전통적 권한, 카리스마적 권한, 법적·합리적 권한으로 나누었다.

23. 다음 중 거시조직이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조적 상황이론(상황적응론)에서는 조직이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면 효과적인 조직설계 및 관리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전략적 선택이론, 자원의존이론, 공동체 생태학 이론은 임의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③ 조직군생태이론에서는 조직변화는 종단적 분석에 의해서만 검증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④ 자원의존이론은 조직이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환경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을 환경과의 관계에서 피동적 존재로 본다.

24. 목표관리제(MBO), 조직발전(OD), 총체적 품질관리(TQM), 리엔지니어링(RE)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표관리제(MBO)는 역할모호성 및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고 일과 사람의 조화수준을 높인다.
 ② 조직발전(OD)은 외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하향적 관리 방식으로 문제해결역량을 개선하려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다.
 ③ 총체적 품질관리(TQM)는 기능적 조직에 적합하며 개인의 성과평가를 위한 도구로 도입되었다.
 ④ 리엔지니어링(RE)은 프로세스의 변화뿐만 아니라 조직구조나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요구된다.

25. 다음 중 균형성과관리(BSC)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거시적·장기적 측면의 조직문화 형성보다는 순익과 같은 미시적·단기적 목표와 계획 및 전략에 초점을 둔다.
 ② 의사소통의 도구로 조직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성과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③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비재무적 지표보다는 재무적 지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재무적 관점의 성과지표는 전통적인 선행지표로서 매출, 자본 수익률, 예산 대비 차이 등이 있다.

26. 업관제와 실적제에 관한 다음 비교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구분	업관제	실적제
①	제도발달의 배경	19C 초 잭슨 대통령의 취임	1883년 펜들턴법의 제정
②	기본적 가치	인사행정의 민주성·형평성	인사행정의 민주성·형평성
③	수단적 가치	정치적·정당적 대응성	능률성과 공무원 권익보호
④	기여	정부관료제의 민주화	정부관료제의 대표성 증진

27. 계급제의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인적자원의 비탄력적 운용
 나. 전문행정가 부족
 다.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저해
 라.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저하
 마. 부서간 협력의 곤란
 바. 보수와 업무부담의 형평성 결여
 사.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편의적 기준 개입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8. 공무원선발시험의 타당성과 신뢰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 결과 근무실적이 좋은 재직자가 시험성적도 좋았다면 그 시험은 예측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지원자의 능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공직적격성 테스트라는 측정도구가 적절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 구성타당성의 문제이다.
 ③ 내용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계량분석기법인 행태과학적 조사를 통한 검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측정도구인 선발시험의 신뢰성이 높으면 그 시험은 반드시 타당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

29. 근무성적평정의 방법과 그 단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열법은 특정집단 내의 전체적인 서열을 알려 줄 수 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다.
 ② 사실기록법은 공무원이 달성한 작업량을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③ 강제선택법은 평정자가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평정대상자를 각 등급에 분포시키고, 그 다음에 역으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는 역산식 평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④ 체크리스트평정법은 평정요소에 관한 평정항목을 만들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질문 항목이 많을 경우 평정자가 곤란을 겪게 된다.

30. 근무성적의 평정오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으로 짝지은 것은?

가. 집중화 경향은 평정척도상 상·하위 등급에 집중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나. 연쇄효과는 중요항목의 평가결과가 나머지 항목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다. 근접효과는 평정시점에 가까운 실적일수록 더 크게 반영하여 평가한다.
 라. 관대화 경향은 평정대상자와의 불편한 인간관계를 피하려는 동기로부터 유발된다.
 마. 엄격화 경향은 실제수준보다 높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것을 말한다.

-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나, 다, 라, 마 ④ 가, 나, 다, 라, 마

31. 공무원 보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 ② 생활급은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로서 공무원과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③ 연공급(근속급)은 근속연수와 같은 인적 요소를 기준으로 하는 보수이고, 직능급은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에 따라 결정되는 보수이다.
 - ④ 계급제의 경우 직책에 따라 보수액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자격에 따라 보수를 결정한다.

32. 예산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정부가 특정수입과 특정지출을 직접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한계성 원칙의 예외로는 예비비, 계속비가 있다.
 - ② 특별회계는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목적세는 공개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 ③ 예산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 ④ 준예산제도는 사전의결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고, 예산의 이용은 한계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33.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종 사회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을 줄여 주거나 받지 않는 등의 재정지원을 예산지출로 인정하는 제도이다.
 - ② 조세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을 포함한다.
 - ③ 조세지출예산서는 직전연도실적과 당해연도 조세지출 금액을 표기하고 있어 다음연도의 계획적인 조세지출을 위한 재정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는다.
 - ④ 조세지출 항목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 신설 또는 폐지되고 의회의 주기적 심사대상이 되지 못할 경우 조세지출예산제도의 의미는 상실될 수 있다.

34. 점증주의 예산결정이론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계획예산제도(PPBS)와 영기준예산(ZBB)은 점증주의 접근을 적용한 대표적 사례이다.
 나. 행정개혁의 시기에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저항 혹은 관료 병리로 평가될 수 있다.
 다. 정책과정상의 갈등을 완화하고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합리성을 갖는다.
 라. 관계의 규칙성,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예산통일의 원칙의 예외, 좁은 역할 범위를 지닌 참여자 간의 협상 등이 예산의 점증주의를 유발하는 요인이다.
 마. 점증주의 예산방식은 예산의 배정이 불안정하며 예산투쟁이 격화될 수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5.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 또는 활동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정부가 무슨 사업을 추진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 ② 단위당 X단위원가에 수행되는 Y개의 업무량으로 표현됨으로써 관리의 능률성을 높인다.
 - ③ 정부의 지출대상이나 지출금액이 명확하여 회계책임과 예산 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 ④ 구체적으로 완성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재원과 사업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는 예산제도이다.

36. 길버트(Gilbert)는 행정통제를 외부통제와 내부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다음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움부즈만 ② 교차기능 조직
 - ③ 대표관료제 ④ 행정 윤리

37. 행정개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행정개혁은 조직관리의 기술적인 속성과 함께 권력투쟁, 타협, 설득이 병행되는 사회심리적 과정을 포함한다.
 나. 사업(산출)중심적 접근방법은 행정활동의 목표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방법으로 분권화의 확대, 권한의 재조정, 명령계통의 수정 등에 관심을 갖는다.
 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조직발전(OD)이나 총체적 품질관리(TQM)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라. 관리·기술적 접근법에는 행정전산망 등 장비·수단의 개선, 행정조직의 계층 간의 의사전달체제의 개선이 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8. 지방행정의 개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넓은 의미의 지방행정의 개념은 관치행정, 위임행정, 자치행정 모두를 포함하고, 가장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은 자치행정만을 의미한다.
 - ②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에 한정하지 않고 지방의 정치·정책기능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③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좁은 의미의 지방행정으로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 ④ 영국에서 실시하는 지방행정은 지방자치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자치행정과 위임행정을 포함한다.

39.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기관통합형에서는 임기 동안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나. 기관통합형은 주민 직선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의장이 단체장을 겸하는 방식이다.
 다.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비판감시 기능을 할 수 있다.
 라. 기관분리형(기관대립형)은 기관통합형에 비해 집행기관 구성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

-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40. 주민참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주민 참여제도의 법제화 순서는 조례제정·개폐청구 제도→주민투표제도→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이다.
 - ② 행정과 시민간의 거리감을 감소시키고 행정의 전문화를 향상 시킨다.
 - ③ 정책의 정당성 및 정책순응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역량과 자질이 증대된다.
 - ④ 대의정치의 결함을 보완하여 행정의 민주화를 고양시킨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 자체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한다.
- 나. 항소심이 신법 시행을 이유로 구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제1심의 증거조사절차 등을 위법하다고 보아 그 효력을 부정하고 다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미 적법하게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법의 취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허용된다.
- 다.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 재판권이 미친다.
- 라.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형사소송의 이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구류, 과료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구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가 치료감호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구 「사회보호법」 규정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③ 검사가 법원의 증인으로 채택된 수감자를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일 검사실로 하루 종일 소환하여 피고인 측 변호인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검찰에서의 진술을 반복하는 증언을 하지 않도록 회유·압박하고, 때로는 검사실에서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④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

3.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상고이유서만을 제출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이유서는 적법·유효한 변호인의 상고이유서가 될 수 없다.
- ②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그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는 결국 공갈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여 공갈죄로 처벌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 ③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그 고발을 하였다 하여도 그 공소제기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지 않는다.

4. 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동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 나.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 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동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 라.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 마.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위반이 있으면 결정으로써 관할위반을 선고해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소송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을 구할 수 있다.
- 나. 상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할 수 있을 뿐 구두로는 할 수 없다.
- 다.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공시송달하는 경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라.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현저한 방식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피고인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③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을 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나 공소제기의 기초를 이루는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내리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④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 특정을 위해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7. 고소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 ②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나,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이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효력은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미친다.
- ④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8. 피의자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더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②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은 동석한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할 시에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9. 합정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흔다 현장에서 체포한 것은 위법한 합정수사가 아니다.
- 나. 위법한 합정수사에 기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그 수사에 기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여야 한다.
- 다.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유인자가 피유인자를 상대로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면 위법한 합정수사이다.
- 라.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가 범죄사실이 많이 늘어난 뒤에야 체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위법한 합정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다, 라

10. 진술거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
- ②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④ 진술거부권은 형사절차에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절차이거나 국회에서의 질문 등 어디에서나 그 진술이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경우에는 묵비권을 가지고 이를 강요받지 아니할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된다.

11.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 ② 참고인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를 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할 수 있다.
- ③ 참고인에 대한 영상녹화물은 증인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수단은 될 수 있지만, 참고인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자료는 될 수 없다.
- ④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12. 변호인의 권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해당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 나.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증거동의를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라 할 것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 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라.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표시를 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과의 접견교통을 제한할 수 없다.
- 마. 고소로 시작된 형사피의사건의 구속적부심절차에서 피구속자의 변호를 맡은 변호인에게는 수사기록 중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등사할 권리가 인정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과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 나.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의 대상자는 구속된 피의자에 한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다.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된 피의자의 석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하고 이는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라. 구속적부심사가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다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마.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4.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이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 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 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① 가, 다 ② 가, 나 ③ 나, 라 ④ 가, 나, 라

15. 현행범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해야 하는데, 여기서 ‘즉시’라고 함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뜻이다.
- ②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아닌 사람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구속영장 청구기간인 48시간의 기산점은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이다.
- ④ 다액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은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16.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 ②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③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그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④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17. 강제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가. 법원의 체포·구속적부심사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 나. 압수·수색영장의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도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면 위법하다.
- 다. 교도관이 재소자가 맡긴 비망록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경우, 그 비망록의 증거사용에 대하여 재소자의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그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이미 구속된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③ 피고인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1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19. 불기소 결정의 사유와 그 유형을 바르게 묶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인 경우 - 죄가안됨
- 나.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 공소권없음
- 다. 친고죄 사건에 관하여 고소가 취소된 경우 - 혐의없음
- 라.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 각하
- 마. 고소사건에서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의 내용으로 옳게 묶은 것은?

(가) 고소한 자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 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나) 법원은 재정신청이 법률상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 없는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를 할 수 있다. 한편 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 법원은 재정신청의 기각 결정을 하거나 재정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에게 신청절차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 ㉠ | ㉡ | ㉢ |
|---|----|------|--------|
| ① | 지방 | 준항고 | 지방검찰청장 |
| ② | 고등 | 즉시항고 | 재정신청인 |
| ③ | 지방 | 즉시항고 | 재정신청인 |
| ④ | 고등 | 준항고 | 재정신청인 |

21. 공소사실의 특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을 고려함이 없이 서면인 공소장이나 공소장변경신청서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 특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직무유기교사죄에서 “전기협 회원들에 대하여 불법과업을 하여 직무유기 할 것을 결의하게 하고, 전기협 회원 6,500여 명이 이에 따라 같은 해 6. 23. 04:00경부터 불법과업에 돌입하게 하여 직무유기를 교사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공모공동정범에 있어 실행정범의 인적사항이 적시되지 아니하고 범행일시나 장소가 명백히 표시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공모 관계, 실행정범의 실행행위가 모두 표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유가증권변조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행일자를 ‘2005. 1. 말경에서 같은 해 2. 4. 사이’로, 범행장소를 ‘서울 불상지’로, 범행방법을 ‘불상의 방법으로 수취인의 기계를 삭제’로 되어 있는 경우, 변조된 유가증권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2.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차적 위반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며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위법하다.
- ②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진행하는 것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23.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으며,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의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 ② 공소장 변경 없이 비지정문화재수출미수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비지정문화재수출 예비·음모로 인정할 수 없다.
- ③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이 「상표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거나, 직권으로 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4.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와 같은 대항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사람을 살해한 범죄(중범을 포함한다)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이 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
- ④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데, 공범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25. 증거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③ 증거개시의 대상에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도 포함된다.
-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26. 증인 또는 증인신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
 나.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증인은 그와 같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라.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이 될 수 있다.
 마. 사고당시 10세 남짓한 초등학교 5학년생으로서 선서무능력자라면 선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의사판단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더라도 증언능력이 없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7.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도,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 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 ③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④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적법한 압수로서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28.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등의 경우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다.
- ② 검사의 접견금지 결정으로 비변호인과의 접견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그 조서가 임의성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묻자, 피고인들이 동시에 “예, 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라고 답을 하였으나, 재판장의 물음에서는 다시 부동산전매업을 도와 주는 모집책이 아니고 단순한 고객일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기망 내지 편취하였다는 내용까지 자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④ 자백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하여야 한다.

29. 증거동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②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증거로 삼을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도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④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30. 탄핵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도 필요하지 않다.
- ③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1.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피고인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을 통해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32.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에서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증거일지라도 증거동의를 의제되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
- ② “甲이 乙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丙의 말을 들은 丁이 丙의 진술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甲의 살인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이지만, 丙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하여는 전문증거가 아니다.
- ③ 휴대전화로 협박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된 ‘전송된 문자정보를 휴대전화 화면에 띄워 촬영한 사진’에 대해 피고인이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 이는 유죄 인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하여 법원이 그 진술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한 검증조서는 법원의 검증결과를 기재한 조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3. 기관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관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1997. 4. 3. 21:5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피해자 甲을 칼로 찔러 乙과 공모하여 甲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데, 선행사건에서 '1997. 2. 초순부터 1997. 4. 3. 22:0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을 소지하였고, 1997. 4. 3. 23:00경 乙이 범행 후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 버린 칼을 집어들고 나와 용산 미8군영 내 하수구에 버려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안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된 증거인멸죄 등의 범죄사실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다.
 - ④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사처벌을 과하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외국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관력이 없다.
34.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소제기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하여야 하며, 항소 및 상고의 제기기간은 모두 7일이다.
 - ② 피고인이 공소를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를 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형사 피고사건으로 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자는 공소제기 당시의 주소지나 그 후 신고한 주소지를 옮긴 때는 자기의 신주소지를 법원에 제출한다거나 기타 소송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만일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고기간을 도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④ 상소는 재판의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으며,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3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의 징역형의 선고유예의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에 제2심이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만, 환송 후 항소심에서 적법한 공소장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 ④ 항소심이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제1심보다 중하게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선고한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6. 재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소송법」상 재심청구는 그 시기의 제한이 없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할 수 있다.
 - ② 재심개시결정은 당연히 그 자체만으로도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 ③ 재심의 대상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이다.
 - ④ 재심의 청구를 취하한 자는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7. 형사보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헌법」은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 ② 형사보상의 청구와 별도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형사보상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할 때에는 형사보상을 하지 않는다.
 - ③ 형사보상은 무죄판결을 받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포함한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가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 ④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을 때에도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다면 무죄의 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38. 즉결심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재정하는 증거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을 함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즉결심판절차에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배제된다.
 - ④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39. 배상명령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배상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공판기일을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공판기일을 통지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 ② 배상명령절차의 취지는 간편하고 신속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있다.
 - ③ 배상명령은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에 한한다.
 - ④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및 면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40. 소년형사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소년 피고인에 대해서도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부정기형도 선고할 수 있다.
 - ③ 소년이 범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④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상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 나.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 다. 경찰이란 용어는 라틴어의 Politia에서 유래한 것으로 도시 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 라. 크로이쯔베르크(Kreuzberg) 판결은 경찰임무의 목적확대에 결정적인 계기를 만든 판결로 유명하다.
- 마. 경찰국가시대에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유지만 할 뿐,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 바. 17세기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통고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거 또는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 내에 범칙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 ④ 경찰서장은 통고처분서 받기를 거부한 사람에 대하여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3. 「행정절차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 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청문 절차시 당사자 등으로부터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유실물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절취된 것이 아니면서 우연히 그 지배에서 벗어난 동산을 말하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여 버린 물건이나 도품은 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습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유실물을 습득한 자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보유한 때부터 2개월 이내에 유실물을 수취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소유권을 상실한다.

5. 「경찰장비관리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전자충격기는 물품관리관의 책임 하에 집중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나, 운용부서에 대여하여 그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용하게 할 수 있다.
- 나.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화물·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형은 차종별로 대형·중형·소형·경형·다목적형으로 구분한다.
- 다. 각 경찰기관의 업무용차량은 운전요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집중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라.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년도에 소속기관의 차량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년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마.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의 경우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된 비밀취급의 인가 및 인가해제 사유와 임용 시의 신원조사 회보서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다만, I 급비밀 취급을 인가할 때에는 새로 신원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비밀취급 인가권자는 업무 상 조정·감독을 받는 기업체나 단체에 소속된 사람에 대하여 소관 비밀을 계속적으로 취급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하는 사람에게 II 급 이하의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있다.
- ③ II 급비밀 및 III 급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책임자가 II 급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때에는 II 급비밀과 III 급비밀을 같은 용기에 혼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 ④ 보관용기에 넣을 수 없는 비밀은 제한지역에 보관하는 등 그 내용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7.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역경찰의 올바른 직무수행 및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 방법, 내용 등 지역경찰 교육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은 지방경찰청장이 따로 정한다.
- 나. 순찰근무의 근무종류 및 근무구역은 시간대별·장소별 치안수요, 각종 사건사고 발생, 순찰 인원 및 가용 장비, 관할 면적 및 교통·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다. 상황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및 치안센터 내에서 시설 및 장비의 작동여부 확인, 방문민원 및 각종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 요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 중요 사건·사고 발생시 보고 및 전파, 기타 필요한 문서의 작성의 업무를 수행한다.
- 라. 행정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역경찰관서 내에서 문서의 접수 및 처리, 시설·장비의 관리 및 예산의 집행, 각종 현황·통계·자료·부책 관리, 기타 행정업무 및 지역경찰관서장이 지시한 업무를 수행한다.
- 마. 지방경찰청장은 소속 지방경찰청의 지역경찰 정원 충원 현황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현원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지역경찰 정원 충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소년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나. 소년부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그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라.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특별히 설치된 교도소 또는 일반 교도소 안에 특별히 분리된 장소에서 그 형을 집행한다. 다만,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마.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에 해당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내사 및 수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건이란 수사기관이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내사단계의 피혐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10. 변사사건 처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형사소송법」에는 변사자의 검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② 「형법」에 있던 변사체검시방해죄는 사문화되어 2005년 「형법」 일부 개정시 폐지되었다.
 ③ 변사사건 신고 접수 이전에 범죄의심·실종 등 사유로 신고 접수 또는 수사를 진행한 경찰서는 해당사건을 변사사건 관할 경찰서로 즉시 이송한다.
 ④ 의료법은 의사 등이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1. 「도로교통법」상 국제운전면허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가.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외국에서 발급받은 사람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2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다.
 다. 국제운전면허는 모든 국가에서 통용된다.
 라.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① 가(X) 나(X) 다(X) 라(O) ② 가(O) 나(O) 다(X) 라(O)
 ③ 가(X) 나(O) 다(O) 라(X) ④ 가(X) 나(O) 다(X) 라(O)

12.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테러단체란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
 ②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테러단체 구성죄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13. 다음 ()안에 들어갈 말로 옳게 연결된 것은?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테러취약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
 이 중에서 (㉠)급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시 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로서 관할 경찰서장은 (㉡)에 (㉢)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B, ㉡-반기, ㉢-1 ② ㉠-C, ㉡-반기, ㉢-1
 ③ ㉠-B, ㉡-분기, ㉢-1 ④ ㉠-C, ㉡-분기, ㉢-2

14.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간첩망의 형태 중 씨클형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① 보안유지가 잘되고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의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③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1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③ 관리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통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릴레이통역이란 3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 ② 생동시통역이란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되는 통역으로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하다.
 - ③ 방송통역이란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걸프전 통역이 대표적인 예이다.
 - ④ 순차통역이란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 방법이다.

18.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은 강제퇴거의 대상이 된다.
 -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 ③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그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 ④ 강제퇴거명령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집행하며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관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을 의뢰할 수 있다.

19. 경찰부패의 원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무엇인가?
- ① 델라트르는 작은 호의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② 미국의 로벅은 '시카고 시민이 경찰을 부패시켰다'고 주장하였다.
 - ③ 경찰부패에 대한 내부고발은 '침묵의 규범'과 같은 개념이다.
 - ④ 썩은 사과 가설은 부패의 원인이 개인이 아닌 조직적 결함에 있다고 본다.

20.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옳지 않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가.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다.
 나.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부분과의 긴밀한 협조·조정이 원활하다.
 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므로 조직·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라.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마.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인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바.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 ① 가, 나, 라
- ② 가, 라, 마
- ③ 나, 다, 바
- ④ 나, 라, 마

21. 한국경찰제도의 역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통일신라시대 이방부는 범죄의 수사과 집행을 담당하였다.
 나. 고려의 순마소는 방도금란의 임무와 왕권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조선의 암행어사제도는 정보와 감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라. 조선의 장예원은 형조의 속아문으로 노예의 장적과 노비 송사를 담당하였다.
 마. 동예에서는 각 읍락의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 노예나 우마로써 배상하는 책화제도가 있었다.
 바. 조선의 사헌부는 왕명을 받들고 왕족범죄, 모반·반역죄, 국사범 등 중요 특별범죄를 관장하였다.
 사. 조선의 전옥서는 형조의 속아문으로 감옥과 죄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22. 경찰위원회와 치안행정협의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치안행정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인으로 구성한다.
 나. 치안행정협의회 위원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된다.
 다. 경찰위원회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라. 경찰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마.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바. 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사. 치안행정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시·도의 기획담당관 및 지방경찰청 경무과장이 된다.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2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③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훈령과 직무명령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한다.
 나. 직무명령은 상관이 직무에 관하여 부하에게 발하는 명령이다.
 다. 직무명령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라. 훈령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추상적 사항에 대하여 발해져야 하지만, 개별적·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도 발해질 수 있다.
 마. 직무명령의 형식적 요건으로는 권한이 있는 상관의 발할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부하공무원의 직무상 독립이 보장된 것이 아닐 것, 법정의 형식이나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출 것이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25. 경찰조직 편성의 원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계층제는 경찰조직의 일체감과 통일성을 확보하지만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나. 둘 이상의 상관으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게 되면 업무수행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령통일의 원리가 필요하다.
 다. Mooney는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하였다.
 라. 구조조정 문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은 통솔범위의 원리이다.
 마. 분업은 전문화라는 장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통찰력을 약화시키는 단점이 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26.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에 대한 신고의무자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다.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라.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7. 다음 중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② 법인의 주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이전 또는 폐지한 때
 ③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
 ④ 특수경비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한 때

28. 「아동복지법」상 처벌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9.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비상호송이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나.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라. 송치하는 금품을 호송관에게 탁송할 때에는 호송관서에 보관 책임이 있고,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송부한 관서에 그 책임이 있다.
 마. 호송 중 중증이 발병한 경우, 24시간 이내 치료될 수 있다고 진단되었을 때에는 치료 후 호송관서의 호송관이 호송을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바.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는 경증의 경우,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 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0. 「교통사고조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충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② 요마크(Yaw mark)란 차의 급제동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회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노면에 미끄러져 생긴 타이어 마모흔적 또는 활주흔적을 말한다.

- ③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④ 전도란 차가 주행 중 도로 또는 도로 이외의 장소에 뒤집혀 넘어진 것을 말한다.

31. 다음 범죄 중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나.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라. 형법 제270조(부동의낙태)
 마. 형법 제355조(횡령)
 바.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사. 형법 제170조(실화)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2.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나.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여야 한다.
 마.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할 때에는 그 어린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자전거의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3. 행사안전경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공연법」 제11조에 의하면 공연장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신고 받은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비업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사장 그 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36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경찰관은 행사경비를 실시함에 있어 매우 긴급한 경우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할 수 있다.
 ④ 행사안전경비는 공연, 경기대회 등 미조직된 군중에 의하여 발생하는 자연적인 혼란상태를 사전에 예방·경계·진압하는 경비경찰활동으로 개인이나 단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다.

34. 통합방위사태 선포시 대응활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걸친 병중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대통령이 선포권자가 된다.
- 나. 통합방위작전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할지역은 경찰청장이 작전을 수행한다.
- 다. 시장·군수·구청장도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금지·제한하거나 퇴거명령을 할 수 있다.
- 라. 을중사태는 적의 침투·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의 침투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 마. 「통합방위법」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5.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중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 ② 「국가보안법」, 「군형법」, 「형법」에 규정된 반국가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재차 특정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최고형으로 사형을 정하고 있다.
- ③ 지방법원판사는 목적수행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④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범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범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3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 체류자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A-1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 나. 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다. E-6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라.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7. 「도로교통법」상 음주 및 약물운전의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승합자동차 운전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PNIO는 국가정책의 수립자와 수행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위하여 선정된 우선적인 정보 목표이며,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 ② EE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며,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 된다.
- ③ SRI는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요구되는 첩보이다.
- ④ SRI의 경우 사전 첩보수집계획서가 필요하다.

39. 한국 근·현대 경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으로 묶인 것은?

- 가. 1894년 일본각의의 결정에 따라 '각아문관제'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 나. 경무청의 장(경무사)은 경찰사무를 비롯해 감옥사무를 총괄하였으며, 범죄인을 체포·수사하여 법사에 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헌병은 일본의 「헌병조례」에 의해 군사경찰업무와 사법경찰업무만을 수행하였다.
- 라.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
- 마. 미군정기에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중요한 경무정책의 수립·경찰관리의 소환·심문·임면·이동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다.
- 바.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었다.
- 사. 소방업무가 경찰업무에서 배제된 것은 소방업무가 민방위본부로 이관되면서부터이다.

- ① 가, 나, 다 ② 다, 라, 마
③ 마, 바, 사 ④ 다, 라, 바

40.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MDMA(엑스터시)는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포용마약으로도 지칭된다.
- 나. GHB(물뽕)은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이라고도 불린다.
- 다. 러미나(텍스트로메트로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데 정글주스라고도 한다.
- 라. S정(카리소프로돌)은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과다복용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 마. L.S.D.는 우편·종이 등의 표면에 문혔다가 뜯어서 입에 넣는 방법으로 복용하기도 한다.
- 바. 야바(YABA)는 카페인, 에페드린, 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순도가 낮다.
- 사. 메스카린은 선인장인 페이요트에서 추출·합성한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 「국세기본법」 상 용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가 있는 자를 말한다.
 - “세무공무원”이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과 세법에 따라 국세에 관한 사무를 세관장이 관장하는 경우의 그 세관장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 “제2차 납세의무자”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상 가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으로 한다. 따라서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액에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액에서 해당 가산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상 근거과세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기장의 내용 전체에 대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정부는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상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과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 불복청구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 과세표준신고서 등과 그 관련된 서류를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과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도달된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국세환급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6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라.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가(O), 나(X), 다(X), 라(O)
- 가(X), 나(O), 다(X), 라(O)
- 가(O), 나(O), 다(O), 라(X)
- 가(O), 나(X), 다(O), 라(X)

- 「법인세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 및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다.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라. 내국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임원인 주주의 경우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한다.
 -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결산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함)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

- 「법인세법」 상 법인세 납세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내국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분납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다.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내국법인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9. 「소득세법」상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① 비실명 금융소득
 - ②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0.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가. 이월익금
 나. 자기주식처분이익
 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라.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마. 자산수증이익과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
 바.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 (주)A의 제17기 사업연도(2017.1.1.~12.31.)의 세무조정목록이다. 옳은 것은 몇 개인가?(단, 각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소득처분은 고려하지 않음)

가. 제16기 사업연도에 납부하고 적정하게 손금에 산입했던 재산세 중 과오납환급금 300,000원을 제17기 사업연도에 수령하고 이를 손익계산서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 <익금불산입> 재산세환급금 300,000원

나. 제17기 사업연도에 사용인에게 상여금 5,000,000원을 지급하고 손익계산서에 인건비로 계상하였는데, 이사회 결의에 따라 사전에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은 4,000,000원이다.
 → <손금불산입> 인건비 1,000,000원

다. 이자수령시 관련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3년 만기 정기예금에 제17기 사업연도 초에 가입하고, 기간경과분 미수이자 500,000원을 제17기 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이자수익으로 계상하였다.
 → <익금불산입> 이자수익 500,000원

-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12. 「법인세법」상 자산·부채의 취득가액 및 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해당 자산을 상품·제품 등 자산별로 구분하여 영업장별로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은 그 취득 금액에 포함한다.
- ③ 신설법인이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3.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및 재고자산의 평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가증권의 평가는 개별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단, 개별법은 유가증권 중 채권의 경우에 한정한다.
- ② 법인이 신고한 평가방법 외의 방법으로 평가한 경우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무신고시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신고한 평가방법에 의한다.

- ③ 법인이 기한내에 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일반적인 재고자산은 선입선출법, 유가증권은 이동평균법, 매매목적 소유 부동산은 개별법으로 평가한다.
- ④ 법인세법상 원가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및 매출가격환원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4.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은 ?

- ① 부동산매매업자가 상가를 판매한 경우
- ② 영업권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
- ③ 골프장회원권을 양도한 경우
- ④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양도한 경우

15. 「법인세법」상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만 묶어놓은 것은?

가.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소상각한 경우
 나.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다.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라.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마. 불공정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라 ③ 나, 라, 마 ④ 다, 라, 마

16.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내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과 평가증을 병행한 경우에는 먼저 감가상각을 한 후 평가증을 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② 정률법에 의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잔존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미상각잔액이 최초로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되는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에 가산한다.
- ③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④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부인액에 충당할 수 있다.

17. 「법인세법」상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②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내국법인은 대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대손금을 대손충당금과 먼저 상계하여야 하고, 대손금과 상계하고 남은 대손충당금의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 ③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로서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 ④ 채무보증(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채무보증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8.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이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
- ②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체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③ 법인이 법령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법인은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19.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완전모법인과 완전자법인은 완전모법인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자법인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일부만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신청을 받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최초의 연결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 날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법인은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당시와 동일한 법인을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다.
- ④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0. 「소득세법」상 금융소득과 그 수입시기가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 ①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보험금 또는 환급금의 지급일(다만, 기일 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
- ②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 해당 법인의 잉여금 처분결의일
- ③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 - 과세기간 종료일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21.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과 그 원천징수세율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개인가?

- 가. 분리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채권의 이자소득 - 30%
- 나. 비영업대금 이익 - 38%(또는 90%)
- 다. 일용근로자의 급여 - 6%
- 라.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연금외수령 가정시 원천징수세율의 70%
- 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접대부·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봉사료 - 3%
- 바. 복권당첨소득 중 3억원 초과분 - 30%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2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가.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나. 뇌물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따라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다. 슬롯머신 및 투전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 라.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마.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임주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액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에 상당하는 금액과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 중 큰 금액으로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3. 「소득세법」상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 ① 논·밭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 그 금액
- ③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④ 1개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제외)

24. 다음 자료에 의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甲의 2017년 종합소득공제 중 인적공제액을 계산하면 총 얼마인가?

- <자 료>
- 1. 거주자 甲(남자, 45세)의 종합소득금액은 50,000,000원이다.
 - 2. 부양가족 현황
배우자 乙(45세, 총급여액 1,000,000원), 어머니 丙(73세), 아들 丁(21세, 장애인), 아버지 戊(2017년 5월 20일에 68세의 나이로 사망함)
 - 3. 부양가족은 모두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배우자 乙씨를 제외한 나머지의 소득은 없다.

- ① 6,000,000원 ② 7,500,000원
- ③ 9,000,000원 ④ 10,500,000원

25. 「소득세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④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26.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주·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하여 전임자가 지급 받는 급여는 기타소득이다.
- ③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는 과세제외금액,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이연퇴직소득 순서에 따라 인출하는 것으로 본다.
- ④ 복식부기 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7. 「소득세법」상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배우자가 연금외수령 없이 해당 연금계좌를 상속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은 상속인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계산한다.
 다.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 포함)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라. 부동산임대업(주거용 건물임대업 제외)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연금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8.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 ③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 또는 조기에 환급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받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9.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② 차입금을 현금 대신 건물 등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③ 사업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하여 대가를 받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④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30.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 ② 사업자가 견본품을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에 의해 재화(금지금 제외)를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④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관세 환급금 등)를 내국신용장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이 대가의 일부로 확인되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식품첨가물이 첨가·코팅된 쌀은 면세대상이 된다.
- ② 국가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③ 면세되는 신문을 판매하는 신문사가 신문지면에 광고를 신고 얻게 되는 광고료 수입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④ 면세를 포기하려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신고를 승인받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32. 다음 자료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과 토지의 임대면적을 계산하면?

<자 료>

가. 도시계획구역 밖에 소재하는 토지 위에 주택과 점포로 겸용되는 1층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주택면적은 120㎡ 이고, 점포면적은 180㎡ 이다.
 다. 동 건물의 부수토지는 3,600㎡ 이다.

	과세되는 건물분	과세되는 토지분
①	없음	720㎡
②	180㎡	2,400㎡
③	180㎡	1,800㎡
④	180㎡	3,000㎡

33. (주)A는 2017년 9월 23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및 건물B, 건물C를 1,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에 일괄양도하였는데, 그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은 불분명하다. 공급계약일 현재 이와 관련된 자료가 아래의 표와 같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것이고, 감정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다.)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기준시가	감정가액
토지	370,000원	370,000원	350,000원	400,000원
건물B	300,000원	330,000원	350,000원	
건물C	300,000원	300,000원		

- ① 600,000원 ② 630,000원 ③ 650,000원 ④ 1,000,000원

34. 「부가가치세법」상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③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는 면제된다.

35. 「지방세법」상 주민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 ① "균등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② "재산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36.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가.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나. 전력이나 그 밖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상품권이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라.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가액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증여재산 및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한다.
- ②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된 장례비용(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에 소요된 금액 제외)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③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④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본다.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합산배제 증여재산가액은 제외)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 ②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을 포함)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 ④ 증여세 과세표준이 1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9.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는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징수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송달불능으로 인해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고, 철회와 동시에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소멸된다.

40.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와 연료는 압류할 수 없다.
- ②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었을 경우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중단된다.
- ③ 압류는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며, 압류를 해제하면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을 개시한다.
- ④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 답안지에 한 번 표기한 답을 수정테이프 등으로 정정하거나 칼 등으로 긁어 변형할 경우 그 문항은 무효로 처리함.

1.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기술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할 때 구매자의 정보를 삽입하여 불법배포 발견 시 최초의 배포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다.

(나) 원본의 내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저작권 정보를 디지털콘텐츠에 삽입하는 기술이다.

(다) 공격자가 공격전에 공격대상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 ① (가) 워터마킹 (나) 핑거프린팅 (다) 워터링 홀
- ② (가) 핑거프린팅 (나) 워터링 홀 (다) 풋프린팅
- ③ (가) 풋프린팅 (나) 워터마킹 (다) 핑거프린팅
- ④ (가) 핑거프린팅 (나) 워터마킹 (다) 풋프린팅

2. 암호학적 해시함수(Cryptographic Hash Function)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어떤 입력 x 에 대해 h(x) 를 계산하기 어려워야 한다.
- ② 주어진 값 y 에 대해 h(x)=y 의 x 값을 찾는 계산이 어려워야 한다.
- ③ 생일역설(Birthday Paradox)은 충돌 저항성 공격(Collision Resistance Attack)과 관련한 수학적 분석 결과이다.
- ④ 입력 길이에 상관없이 고정된 길이를 출력한다.

3. MD5(Message Digest 5)는 널리 쓰는 해시함수이며, 최종적으로 ()비트의 해시코드를 출력한다. () 안에 들어갈 적합한 숫자는 무엇인가?

- ① 64 ② 128 ③ 256 ④ 512

4. 공개키 암호 시스템을 이용하여 Alice가 Bob에게 암호문을 전달하고 이를 복호화하는 과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1. Bob은 개인키와 공개키로 이루어진 한 쌍의 키를 생성한다.

2. Bob은 (가)를 Alice에게 전송한다.

3. Alice는 (나)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암호화한다.

4. Alice는 생성된 암호문을 Bob에게 전송한다.

5. Bob은 (다)를 사용하여 암호문을 복호화한다.

- ① (가) Bob의 공개키 (나) Alice의 공개키 (다) Alice의 개인키
- ② (가) Bob의 개인키 (나) Bob의 공개키 (다) Bob의 개인키
- ③ (가) Bob의 개인키 (나) Alice의 공개키 (다) Alice의 개인키
- ④ (가) Bob의 공개키 (나) Bob의 공개키 (다) Bob의 개인키

5. 임의적 접근통제(DAC : Discretionary Access Control)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객체(데이터)의 소유주에 의하여 접근권한 변경이 가능하다.
- ② 일반적으로 ACL(Access Control List)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③ 민감도 레이블(Sensitivity Label)에 따라 접근을 허용할 지 결정한다.
- ④ ID기반 접근통제이다.

6. 대칭키와 공개키 암호화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일반적으로 안전한 키 길이는 대칭키 방식의 키가 공개키 방식의 키보다 길다.

나. 대칭키 방식의 암호화키와 복호화키는 동일하며, 모두 비밀이다.

다. 공개키 방식의 암호화키와 복호화키는 모두 공개이다.

라. 일반적으로 암호화 속도는 대칭키 방식이 공개키 방식보다 빠르다.

마. 대칭키 방식의 알고리즘에는 AES, SEED, ECC 등이 있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접근통제모델은 무엇인가?

접근통제모델 중 효율적인 업무처리(Well-formed transactions)와 직무분리(Separation of duties) 두 가지 원칙을 통해 좀 더 정교하게 무결성을 보장하는 모델이다.

- ① 벨-라파둘라(Bell-LaPadula)
- ② 비바(Biba)
- ③ 테이크 그랜트(Take Grant)
- ④ 클락-윌슨(Clark-Wilson)

8. 생체인증기술의 정확도는 부정거부율(FRR : False Rejection Rate)과 부정허용율(FAR : False Acceptance Rate)로 측정할 수 있다. 생체인증기술의 정확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가. 사용자 편의성을 요구하는 경우 FAR이 높아지고 FRR은 낮아진다.

나. 사용자 편의성을 요구하는 경우 FRR이 높아지고 FAR은 낮아진다.

다. 보안성을 강화할 경우 FRR은 높아지고 FAR은 낮아진다.

라. 보안성을 강화할 경우 FAR은 높아지고 FRR은 낮아진다.

-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9. 다음 중 취약점 점검 도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SARA ② NIKTO
- ③ TCP WRAPPER ④ NESSUS

10. 윈도우 파일 시스템 NTFS(New Technology File System)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 ① NTFS는 기본 NTFS 보안의 공유 보안과 동일하게 Everyone 그룹에 대해서는 모든 권한이 '허용'이다.
- ② 기본 NTFS 보안을 변경하면 사용자마다 서로 다른 NTFS 보안을 적용시킬 수 있다.
- ③ 파일과 폴더에 대한 보안강화 및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 ④ 저장량 볼륨에 최적화되어 있다.

11. 다음 중 윈도우 레지스트리 키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HKEY_CLASSES_ROOT
- ② HKEY_CURRENT_USER
- ③ HKEY_MACHINE_SAM
- ④ HKEY_USERS

3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내용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다른 사람을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7. 「전자서명법」 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제4항의 내용 중 () 안에 들어갈 단어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가)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나)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다)에(게)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① (가) 생성 (나) 생성 (다) 인터넷진흥원
- ② (가) 검증 (나) 생성 (다) 인터넷진흥원
- ③ (가) 생성 (나) 생성 (다) 이용자
- ④ (가) 생성 (나) 검증 (다) 이용자

38. 다음 지문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 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활동이나 기술
- 나. 데이터 복구 회피기법
- 다. 데이터 은닉(Steganography)

- ① Anti Forensic ② Digital Forensic
- ③ Root Kit ④ Stealth Scan

39. 1998년 Guidance Software Inc.가 사법기관 요구사항에 바탕을 두고 개발한 컴퓨터 증거분석용 소프트웨어인 엔케이스(EnCase) 고유의 포렌식 디스크 이미지 파일형식은 무엇인가?

- ① FTK ② dd ③ SHA ④ E01

40. 다음 지문에서 설명하는 디지털포렌식의 원칙은 무엇인가?

증거는 획득하고 난 뒤 이송, 분석, 보관, 법정 제출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명확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대한 추적이 가능해야 한다.

- ① 정당성의 원칙
- ② 재현의 원칙
- ③ 연계 보관성의 원칙
- ④ 무결성의 원칙